

11차시 [친구들에게 돈을 뺏긴 A군은 공제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을까?]

<학습목표>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의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구상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례>

사건의 개요

문] T시가 설치·운영하는 S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A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초부터 같은 반 친구인 B, C, D, E 등으로부터 화장실에 불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학용품을 빼앗기고 수업시간에도 지우개로 맞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1주일에 30,000원씩 1년 이상돈을 빼앗겨 오다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가해학생들은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침을 뱉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A는 얼굴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교실 내에서도 B, C가 주도적으로 A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친구들과 앞에서 엄마말만 듣는 ‘마마 걸’이라며 비하하기도 하였고, A가 보낸 핸드폰 문자에 아무도 답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A와 친하게 지내려는 친구들에게 A의 험담을 하면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B, C, D, E 등이 A에게 누가 가장 무서운지 그 순서를 정하라고 하였고, 점심시간에 교실 내에서 무서운 순서에서 1순위에서 밀린 C, D, E가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 C, D, E와 그 보호자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A 및 A의 보호자는 S고등학교장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및 그

동안 빼앗긴 돈에 대해서 공제급여를 청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S고등학교 교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제급여 청구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A의 보호자는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및 그동안 빼앗긴 돈에 대해서 공제급여를 청구하였다.

S고등학교 교장이 공제급여 청구를 해줄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A의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공제급여를 청구한 것은 타당한가?

A의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공제급여를 청구한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및 그동안 빼앗긴 돈에 대해서 공제급여를 청구한 금액은 지급될 수 있는가?

학교안전공제회가 A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B, C, D, E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및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제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모든 치료비 및 빼앗긴 금전이나 위자료까지도 가능한지 여부 및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에게 공제급여를 해준 경우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건의 결말

S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학부모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A의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공제급여를 청구한 것은 타당하다.

A의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공제급여를 청구한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및 그동안 빼앗긴 돈에 대해서 공제급여를 청구한 금액은 지급될 수 없으며, 그 중 학교폭력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요양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혜택을 받고, 본인이 부

담하는 본인부담금 중 학교안전공제회가 인정하는 금액만 지급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A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B, C, D, E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두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장의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활동 중 학생, 교직원 등이 입은 생명 또는 신체적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있어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이 되나, 금품 갈취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학교폭력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요양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혜택을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중 학교안전공제회가 인정하는 금액이다. 학교폭력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요양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혜택을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중 학교안전공제회가 인정하는 금액이다. 폭행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치료비 전액이 청구되지만,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는 그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게 된다.

1. 학교폭력도 학교안전사고인가? - 동영상 강의

학교폭력도 학교안전사고이며 동법률에서 공제급여를 제한하는 경우(동법 제43조)인 "1. 피공제자의 자해 · 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 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인가? - 동영상 강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두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의2호). 판례는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결국 집단따돌림이란 학급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 및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사사건건 놀린다거나 이유없이 툭툭 치거나 욕설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서, 그 특징적 요소로는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힘의 불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집단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으로 이에는 구타,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과 소외, 심리적 배제 등 간접적인 폭력 모두를 포함한다.

3.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이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 관한법률'이며, 동법률에서는"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4.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의 학

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학교시설의 안전점검의 의무화 등 필요한 대책 규정하고 있으며, ③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피공제자로 규정하여 피공제자의 범위 확대하였으며, ④ 공제급여의 종류 및 내용, 지급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였고 및 공제료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⑤공제급여의 보상범위 확대를 확대하여 공제급여의 종류를 확대(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이외에 간병급여, 장의비 추가)하였으며, 공제급여 보상 대상을 확대(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에 발생한 사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및 접촉에 의한 질병 등)하였으며, ⑥ 공제료 책정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고,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학교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료 책정 후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⑦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를 둠으로써 공제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제급여 지급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하였으며, ⑧ 불복절차에서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도록 하였다.

5.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1)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이다.

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고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법제43조1항 1호) 및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자살·자해 등의 사고피공제자, 공제가입자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

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고(법제43조1항 3호)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사고이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법제43조 1항 2호)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 사고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공제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정규교육활동의 종료시간 및 사고발생 시간, 체류시간 중의 활동 상황, 교사의 체류지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의 경우에만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이다.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의 파괴와 그로 인해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그 이외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접적인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

6. 현장학습에서 다른 학교 학생에게 구타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한 경우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서 학교장의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활동 중 학생, 교직원 등이 입은 생명 또는 신체적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있어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이 되나, 금품 갈취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학생이 교사 또는 동료와 함께 활동하지 아니하고 구타를 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제반 경위 및 사고의 신고 등을 게을리 하여 가해자를 찾지 못하게 된 책임 등을 엄격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7. 학교폭력의 경우 공제급여 청구 및 구상권 행사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서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란 가해를 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로 단순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관계기관(학교, 경찰서 등)에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를 실시하였으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결과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해자가 분명하지만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무자력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등 관계기관의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회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제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부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게 된다.

8. 학교폭력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

학교폭력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요양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혜택을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중 학교안전공제회가 인정하는 금액이다. 폭행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치료비 전액이 청구되지만,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는 그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게 된다.

9. 집단따돌림을 당한 피해학생의 정신과 치료비에 대한 보상 여부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집단따돌림에 의한 피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가해자가 명백하지만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배상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

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에도 그 보상범위는 법률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되며 정신과 치료, 위자료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통상적인 학교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정신과 치료비나 위자료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공제급여 청구권자는 학교 및 보호자이며, 치료가 끝난 경우는 물론 치료중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정리하기

학교폭력도 학교안전사고이며 동법률에서 공제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서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란 가해를 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로 단순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관계기관(학교, 경찰서 등)에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를 실시하였으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결과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해자가 분명하지만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무자력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등 관계기관의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회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제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부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게 된다.